

71年 民間經濟白書

抄錄 〈完〉

1. 産業政策的 景氣浮揚

71년의 한국경제는 安定基盤의 構築을 위한 緊縮政策實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高成長의 구조적 부작용이 국제경제 급변의 波長에 부딪쳐 마침내 경제전반의 沈滯로 까지 번진 양상을 보여준 데 특징이 있다 하겠다.

정부주도적 개발정책은 금융의 자율성을 제약하여 財源配分の 適正성과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였고 高膨脹의 財政은 不均衡의 先行投資와 慢性的인 인플레이를 結果하였으며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은 高度成長에 부수된 輸入誘發效果를 확장시켰고 人爲의 가격통제는 가격구조의 乖離를 가져와 所望産業의 부진이라는 背理를 초래하였다. 그 위에 量的 실적위주의 수출정책은 原資材輸入激增과 금융의 偏重, 原資材代替産業의 不振과 外貨稼得率 저하 등 국내산업기반의 확충과는 遊離된 跛行性을 深化하여 왔다. 더우기 수출지향적 산업시설의 확충은 경쟁력이 결여된 세분투자로서 過度하게 保護된 국내시장에만 의존케 됨으로써 總量的 過剩施設과 과당경제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自力辨濟能力이 미흡하게 된 外債企業의 가속적인 부실화를 결과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69년말부터 시행되어 온 안정정책의 추구는 金融緊縮一方向으로만 치우쳐 산업의 구조적 補完, 나아가 경제전반의 整合性을 소홀히 하였고 기업체질전진화에 정책적 작용을 逸失함으로써 과도한 對外依存的 체질하에 밀어닥친 국제경제激動의 물결이 우리경제의 耐久力을 한계점에 몰고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우리 경제는 近者 부분적인 과잉생산, 과당경쟁, 그리고 반면 수입수요의 急膨脹, 企業收支의 가속적 악화, 자금부족등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踏襲만으로는 정책지향이 相衡되는

어려운 여건을 마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장기적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당면 현실문제에 대처하는 진중성과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되리라 본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그 고도발전의 과정에서 바이어스·마아케트라는 시장성격의 변모에 따라 국내시장의 확충과 해외시장의 개발을 經濟消長의 關鍵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自律機能의 誘導와 이에 副應하는 민간기업의 창의적 이윤추구를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 경제발전과 성장전략의 장기적 안목도 여하히 국내시장을 확충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느냐에 두고 민간기업활동과 정부의 유도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점 조정하는 데서 장기경제운용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면景氣浮揚의 문제도 不況下에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企業의 成長潛在力을 長期政策的 眼目下에 浮揚시키는 자적의식하에서 그 정책방향을 定立해야 할 것이다.

이에 먼저 당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황이 年 10% 이상의 성장과 동시에 나타난 것이며 금융비용, 賃金코스트, 원자재 등 要素비용이 騰貴하고 있는 코스트 푸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점, 그리고 산업의 지나친 對外依存과 潛在수요가 膨湃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균형의 深化에 의한 소득분극화적 상황하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회복책도 일반적인 안이성을 경계하여 과거 2년여간의 안정화노력이 水泡化하지 않도록 漸進的 施策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60년대 고성장의 경제基調를 조정하여 산업부분별 성장(乖離)의 조정 및 구조적 계층의 보완 나아가 政府主導的 開發정책

추구에 연유한 경화된 경제 메카니즘의 회복, 이를 통한 자원의 낭비, 경제운용의 비능률의 제거로서 전진성장의 바탕을 다질 수 있는 조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신년 2월 14일 발표된 당면경제시책은 경기대책으로서 ① 租稅의 縮小調整 ② 100억원의 산업합리화 자금 방출 ③ 자금 출처조사의 緩和 ④ 공공사업의 早期發注 ⑤ 건축경기의 振作을, 국제수지 개선책으로써 ① 통화량의 연간 20% 선의 증가堅持 ② 부당한 가격인상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가 그 자체만으로써도 상호 相衡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정책을 一貫하는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저요기 疑懼스러운 바 없지 않은 것이다.

즉 정책효과와 相衡이라 함은 먼저 예산규모의 변동없는 租稅의 감축은 결국 적자에산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인바 비록 事後에 관계수입으로 補填한다 하더라도 예정되고 있는 270여억원의 早期工事發注와 100억원의 합리화자금 방출은 일시적인 유동성 膨脹을 결과할 것이며 이것과 인플레이와의 관계에 대한 선명한 방향지시가 없다는점, 둘째 관세율 인상 및 減稅幅의 縮小와 수입금융의 폐지에 의한 수입억제가 절대적인 對外의존하에서의 물가에 미칠 波及效果, 이로 인한 대외경쟁력의 약화, 불황의 加重, 企業收支악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가 명백치 않다는점, 셋째 上記 정책이 경기浮揚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으나 부동산경기의 振作, 低利資金의 공급증대 등이 不健全投資에 流入되어 자금유통의 偏向 및 경제구조의 加一層의 부실화를 가져 오지 않도록 어떻게 制禦하여 健全基盤의 구축을 誘導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구상이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신중한 정책집행조정에 대해 반추를 요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국제수지 대책이 수입억제단을 강조했을 뿐 이에 포함되어야 할 자본거래 특히 외자도입 방점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다는 점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政策遂行은 보다 장기적인 정책목표와의 연결하에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實踐細目과 이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코자 한다.

여기에서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경제체질의 국제화적응력의 배양을 第一義의 과제로 하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충실케 함으로써 해외시장의 확대를 기하고 기업의 底力과 進取力을 제고하여 경기적응력을 강화하며 경제자율기능을 회복하여 經濟循環基調을 정상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임을 지적코자 한다.

2. 經濟自律調整力 發揮를 위한 政策與件

政府先導下 개발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했다 할 政府偏向의 정책패턴은 대폭 확대된 경제규모와 질적으로 深化된 多元的 경제구조하에서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그 정책효과가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基調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기능에 있어 유기적 보완관계를 再整合하고 시장경제적 자율기능의 확충에서 국제화 적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실 우리 경제는 자체기능의 總合的 媒介變數라 할 가격기능에 지나치게 빈번한 局部的인 직접개입이 가해져 왔다. 이는 한편 산업의 불균형과 생산력의 低位 및 高成長과정에서 과잉공급된 유동성의 膨脹에 말미암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임시적 방편의 결과 이었음은 부인할수 없는 것이나 그 근원적 대책의 병행이 미흡했음을 간파 할 수 없다 하겠다.

그 결과 안정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된 물가구조의 乖離는 이제 부분적 가격통제효과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持續的 물가상승의 원인은 과도한 他人資本依存下의 高金利, 기업부담을 加重해 온 高稅率, 換率과 물가의 상승작용

에 의한 부담과중, 공공요금인상, 貨金引上等 諸코스트 푸시에 기인하고 있다 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업수지압박과 기업의 체질적 脆弱化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미흡이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시장에 執着케함으로써 야기된 과당경쟁은 물가구조의 乖離를 加重하고 있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에 가격의 媒介的 功能확충을 통한 경제자율조정력이 경제전반의 균형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는 産業斷層의 보완과 成長乖離의 조정에 의한 산업의 균형화 및 연관도의 深化라는 산업구조적 측면과 가격의 현실화를 기초로한 단계적 안정화라는 정책확립에 바탕을 둔 總合的 장기 안정정책의 확립이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국제화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저력배양과 자전력의 伸張을 통한 대외경쟁력의 확충이 국내과당경쟁의 緩和내지 가격구조乖離의 시정, 나아가 전경제기반構築의 要諦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의 균형화,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을 유도, 배양하여 가격자율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여건변동에 대응할 충분한 적응력과 彈力性을 배양키 위해 金利, 환율, 租稅, 공공요금 등은 그 정책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金利는 그 자체가 資金需給의 媒介變數로서 경제전반의 균형이 이룩된 후에는 스스로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제 각부문간의 불균형이 편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誘導政策의 수단으로 인위적 책정이 요청된다. 諸般要因에 의하여 한계상황하에 있는 기업체질을 勘案 물가상승을 補償할 수 있는 最低線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정책목적 자원배분과 相補하여 소망산업의 육성과 건설화를 기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이다.

또한 대내의 균형화의 媒介變數인 환율은 기업체질의 국제화와 경쟁력 提高를 誘導하고 국제수지균형화의 수단으로서 實勢를 반영토록 하여야 하겠으나 現下의 脆弱한 국내기업체질 및 산업기반과 막대한 外債負擔下에 극도의 기업收支壓迫을 겪고 있는 대부분 외자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의 底力擴充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實勢水準에 접근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貨金은 자본장비의 고도화에 따른 추가적 기업부담을 差減한 實生產性向上과 기업이윤율, 물가추세를 감안한 가이드·포스트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勞·使·政府 삼위일체적 努力을 傾注함으로써 건설적인 산업평화를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요금을 當該事業의 산업전반에 대한 광범한 波及影響과 공익性을 主眼으로 하여 영위 되어야할 사업의 사용료라 하겠는바 이들 사업은 그 자체로서 최대한의 경비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이며 절대적인 수지불균형이 있더라도 이에 앞서 전체산업의 체질강화라는 문제에 유의하여 특히 수지압박에 의한 산업의 脆弱化라는 긴박한 상황하에서는 이의 인상을 가급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國際收支均衡을 위한 産業再編成

그동안 우리의 개발정책은 산업확충면에서는 수입대체産業을 경제정책면에서는 수출제일주의를 지향하여 왔다. 그 결과 고도성장길에 연유한 급속한 소득증가와 高消費趨勢는 最終財의 수입대차産業을 先發시켰고 그로 인한 원자재산업과의 斷層은 급진적으로 원자재의 대의 의존도를 深化하였으며 수출과 소득증대의 수입유발효과는 年年 수출입갭의 확대를 不免케 하였다. 또한 양적 성장위주의 수출정책은 금융의 지원과 면세보상등으로 국내기초산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상대적 위축을 가져왔다. 따라서 그동안의 수출伸張은 국내산업저력의 자연발생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지원에 편승한 수출選好의 결과라 하겠으며 점차 기초산업과의 遊離를 초래하여 그 성장의 파급효과 및 소득효과가 감소된 가운데 수입의 확대와 가득률의 저하를 결과하였고 수출의 양적 실적에 비례한 각종 지원은 국내원자재 활용을 의면케 하였다.

이에 작금 수출지원시책의 전면 재검토와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바이나 수출이 산업의 前後方聯關効果와 소득유발효과를 擧揚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과의 연관체제를 조속히 형성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가득률에 따른 差等지원과 국내원자재산업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산업체제를 시급히 再編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종합제철이나 석유화학비나트의 조속한 稼動이 소망되는 바이나 다만 특히 강조되어야 할것은 중정의 일부 원자재산업이 과잉 세분투자에 의한 단위의 영세성 기술의 未洽등으로 공급단가와 품질면에서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경영의 부실은 물론 수출제품산업으로부터 외면되어 국내시장에서만 과당경쟁을 벌려온 사실을 깊이 省察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아울러 특히 重化學 기초원자재산업의 건설은 반드시 最終財產業과의 관련된 加工系列産業이 균형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留意하여 産業斷層이 발생치 않도록 산업정책적 誘導助成策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산업과 국내원자재산업이 이상적 균형적으로 연결되어 수출의 경제성장 牽引効果가 충분히 발양된다 하더라도 원유, 목재등 기초원료의 대외의존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인바 이에 대한 국내소비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할것이며 기타 수출원자재의 로스를 절감, 양곡자급, 무역의수입의 증대등이 제반 의화절감 의화수입증대 등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만 국제수지문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4. 輸出企業 育成과 國內市場 調整

수출의 振作이나 수출기업의 육성에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상당한 금융지원이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전술한바와 같이 국내산업基盤과 수출간의 乖離發生으로 우리의 실정하에서 이가 산업연관적 과급효과를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출업체는 과도한 금융의존 체제하에 수출의 양적 확대를 지속하여 온 결과 그 財務構造上 일반기업보다도 더욱 他人資本依存度를 높여왔다. 이는 바로 여건변화에 상응한 彈力的 적응력의 萎縮을 나타내는 것이며, 시장개척을 위한 파이오니어의 위험을 회피하여 既存市場에만 집착케 함으로써 수출시장의 偏重化 및 既存市場에서의 수출과당경쟁을 유발해온 원인이 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체질강화 역시 수출관계산업의 전형적 발전에 못지 않게 緊要視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한편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미흡한 현 상황하에서 그 저력의 확충은 이미 언급한 産業政策的 側面外에도 出血輸出을 어느정도 補償할 수 있는 국내가격의 維持 및 市場調整이 수반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業者間的 자율조정이 소망되는 바이나 그 자율조정은 그 나름대로 適正國內 價格의 維持와 併行하여 수출질서의 확립, 수출가격의 조정등으로 무모한 國內의 市場攪亂을 자제하는 방향에서 건전한 運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그동안 수출의 약진적 확충은 수출품 중의 工產品比重의 증대에 힘입은 것이며 주로 가공제품의 생산확대와 수출지향에 의해 이룩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제조업성장율을 월등히 초과하는 수출확대목표의 책정은 이의 달성을 위한 지나친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가 수출산업의 實質競爭力을 취약케한 一因이었음을 깊이 감안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71년에 세계무역 확대에 暗影을 던져 주었던 國際通貨혼란이 연말에 이르러 終熄되고 歐洲 및 日本通貨가 상대적으로 相當幅이 切上되었으며 UNCTAD를 통한 年例의 續제였던 對저개발국 特別관세의 제공이 본격화할 단계에 이른점 등 해외시장여건의 好機를 수출확대전략에 충분히 반영, 획기적인 輸出伸張의 전기로 선용하여야 할것이다

5. 企業主導型稅制 및 稅政에로의 轉換

종래 政府지도하의 개발정책은 租稅의 大幅 增收에 의한 경제저축과 이에 의한 정책적 산업건설에의 투입으로 국민의 財政부담을 높여 온 결과 高成長에 부수한 민간기업의 他人資本에 의한 高投資는 과열경기의 鎮靜과 더불어 경영隘路의 가중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對政府의존을 深化하여 왔다.

이는 민간기업의 안이한 경영자세에 起因한 바 크다 하겠으나 한편 인플레이의 물가상승, 高金利, 한국적 사회풍토하에서 胚胎된 경영외 비용 과다등 경영환경의 불리와 함께 高稅率 구조하의 과중한 기업 租稅부담에 연유한바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제 경제자율기능에 의한 경제의 整合이 요청되고 있음과 더불어 경제의 능률화를 위해 민간기업중심의 投資配分이 소망되는 것이라면 稅制와 稅

政은 기업저축과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이 또한 기업건설화 조성의 수단이 되고 기업의 대 정부의존을 완화, 경제자율기능을 확충할 방편이 될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租稅政策目標은 기업중심의 자율적인 투자 패턴을 誘導하도록 가급 기업부담을 輕減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겠으며, 공개경영을 誘導 기업경영의 能률화와 소득배분의 擴散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이와 아울러 租稅政策은 또한 금융정책과 상호보완하여 기업의 건전성장을 誘導할수 있는 景氣補整的 기능을 발휘토록 함이 요청되는 바 따라서 租稅징수의 경기대응적 執行이 요청된다 하겠다.

특히 稅政面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기강확립, 징세행정의 과학화 및 현실적응적인 탄력성의 발휘로 기업활동을 沮害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租稅抵抗을 예방하고 稅源의 지속적 배양을 留意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정부재정의 膨脹은 이것이 바로 민간경제영역을 상대적으로 萎縮시키는 것이며, 그 상당부분이 財政投融資로서 기초산업의 건설에 投下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經濟諸部門間 불균형의 조정적 정합이 요청되는 상황하에서 財政投融資는 불가결하고 시급한 기초산업건설과 補正投資에 국한함으로써 그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상 租稅의 年차별 상한선을 上向式으로 집계, 擔稅經濟部門의 경제성장기여율 범위내에서 책정토록 하여 그 규모를 縮小調整하여야 할것이다.

6. 金融正常화와 擴大된 運營資金 供給

經濟部門間 균형화에 있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시급한 금융정상화를 들수 있겠다. 그러나 그동안 財政主導的 경제 운용과정에서 가장 歪曲된 분야가 금융이라 하겠는 바 그 근본원인은 금융의 他律性 및 상업은행기능과 정책금융적 기능의 증복화에 있다 하겠다. 이는 전금융기관이 그동안 開發財源調達의 總動員이었던 데서 벗어난 결과라고도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은행경영에 대한 不健全한 政府關與 및 재정의 금융침식

등 운영의 자율성沮害에 그 원인을 구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과 운영자세는 급기야 금융기관 자체의經營隘路의加重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특히 상업은행은 기업의運轉資金과流通金融供給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크게萎縮됨으로써, 경제적 역할에 불실함을 결과하였다.

따라서 금융의 정상화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각기 그 기능영역을 고수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서 구해야 할 것이며 채운운영과 경영자세의匡正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업은행은獨自的判斷과責任下에代佛貸出을根絶하고 재정지원적 부담을 지양함과 동시金融供給源을확충함으로써運轉資金및 유동금융에全力하여景氣浮揚을 위한資金循環의圓滑化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금융정상화를 이룩토록保障, 誘導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한편 정부는 상업은행의機能強化支援과 더불어 경제循環의 추진을 위해 既構想中에 있는倉荷證券制度및 在庫金融의 시행과 더불어 商業어음의割引限度 확대로 유동금융중심의資金配分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正常금융 渠道에서 漏出된 私債資金의 제도금융으로의流入을 위한 여건의造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企業은 종래 間接金融에만 偏重 依存해온 資金調達 패턴을 전환하여 私債資金의 制度金融 渠道로의 誘導政策과 併行, 주식의 공개확산과 사채발행등 직접금융으로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誘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多國籍企業의 誘致와 새 經協方向

우리 경제의 당면隘路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국시장의 협소와 해외시장개척의 미흡에 연유한다 하겠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확충을 위한 소득의 균형화, 농가소득의 향상도 중요한 것이나 海外市場의 週期的擴大가 隘路解消의 근원적 과제이며 경제발전의 關鍵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가 산업의 국제수준미달과 기업경쟁력의 脆弱性으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산업단위의 영세성, 기술의 미숙, 資金不足, 海外市場網의 미흡에 연유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諸要因을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多國籍企業의 誘致와 합작투자의 증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선 海外販路의 확충및 자금流入을 기함과 동시 外資優選負擔에 의한 기업체질의 악화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날로 혁신되고 있는 新規技術의 자연도입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多國籍企業의 誘致에 있어 그 독점적 위치는 制禦하여 유효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이며 外資誘致受容態勢를 경영정보면에서 개선하여 多數國의 투자를 가급 균형되게 誘致함으로써 현재의 資本流入 및 해외시장의 偏倚性을 是正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多國籍企業誘致와 해외시장多邊化의 추진에 있어 국제정세변동에 대응한 安保의視角에서의 고려와 對非敵性共產圈과의 교역에 대한 명확한 指針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사후의 정책변경에서 오는 국제신용의 차질을 예방토

록 해야 할 것이다.

8. 勞動需給의 斷層豫防과 人力開發의 平準化

급속한 개발과 成長은 工業部門에의 노동력流入에 拍車를 가해 왔으나 이로 인해 기능공의 부족과 需給上에 차질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향후 産業高度化推進에 따라 큰 隘路部門으로 등장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事前的 對備策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더우기 輸出立國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中共을 포함한 後進諸國의 국제시장 진출은 특혜관세의 실시와 더불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상황하에서 종래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구조로부터 技術集約的 高加工度産業으로의 移行을 위한 熟練技術노동력의 뒷받침이 緊要視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良質노동력에 의한 對先進國 및 對後進國 比較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人力개발계획의 수립 실현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계획의 수립에는 産業發展方向에 대응한 熟練勞動力의 경제적, 효율적 양성을 위한 업종별 需要推定の 適確을 기하고 분산되어 있는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기구의 지역적 통합, 運用의 능률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過熱景氣의 急下降과 國際經濟衝擊에 의한 企業收支惡化 및 국가非常事態라는 사회적 긴장하에 自制되고 있는 勞動行爲가 코스트푸시에 의한 물가상승 및 소득분배의 偏向으로 自制의 한계를 逸脫할 可能性을 배제할수 없는 실정임을 勘案, 노동의 生産性提高로 책임의 꾸준한 適正引上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科學技術과 産業은 夫婦와 같은 關係에 있다 집안 살림이 夫婦의 協同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듯이 科學技術은 産業隆盛의 絕對的인 要素이며 따라서 産業人은 科學技術開發에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科學技術人은 産業經濟의 動向을 銳意 注視해야 하겠기에 여기 '71年 民間經濟白書 (全國經濟人 聯合會·經濟技術調査센터 發行)의 抄錄을 收錄하는 바이다.....編輯部